

장애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공동성명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사각지대 개선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으며 사회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주도해 왔다.

특히 상시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민간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단체는 지난 60여 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대신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설 vs 탈시설의 이분법적 선택 및 이념적 논쟁에 휩싸여 있으며 국회마저도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되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여기모인 우리는 탈시설 지원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무책임한 국회 법안의 문제를 고발한다.

탈시설을 논함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과 그 가족, 이들과 60여년 함께해 온 장애인거주시설과 종사자, 그리고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배제시켰다.

단순히 시설의 폐쇄라는 목적 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애인이 누려야 할 다양한 참여 및 결정의 권리를 역으로 제한·박탈·구속하고 있다.

탈시설 이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사회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개선 등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대안도 불명확하다.

시설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없이 무작정 시설 입소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할 시설을 찾지 못한 경우 아동·노인 등의 타분야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찾아 전전공공하다 결국 장애 자녀와 동반자살을 하는 가족들의 사례가 몇 년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탈시설은 상시 의료 및 행동적 지원 등 보다 세심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하는 발달장애인과 아동·중증·와상·고령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 욕구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무책임한 탈시설 지원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표명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탈시설 찬성과 반대라는 ‘악의적 이분법의 프레임’에 갇혀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탈시설’이란 부정적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보편적 삶을 위한 ‘지역사회 삶, 거주 시설의 다양화’라는 용어사용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시설 장애인과 가족, 시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상기 요구 관련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구한다.

2022년 4월 20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